

북한경제 연구방법론에 관한 고찰

정은이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eunlee7512@hanmail.net

1. 북한경제의 상황과 연구의 쟁점

북한 연구는 자료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따라서 198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의 북한학은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 뒤흔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한국에 탈북자가 3만명인 시대에 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북한 연구자들은 최소한 경제부문에서 만큼은 현상을 쫓아가기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북한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연구도 이제는 정보가 부족해서 연구하기 어려운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연구자가 ‘사실(fact)’을 어떠한 객관적 근거에 의거하여 선별하고 처리하느냐가 문제이다. 어떤 방법론과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북한경제 관련 정보의 원천이 상대적으로 풍부해졌다고는 하지만 연구자들이 접근 가능한 자료는 여전히 한정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기법을 통해 북한경제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는 평양이나 신의주 등 남쪽지역보다는 함경도 등 북쪽지역 출신이 대부분이며 여성들이 많고 상층부도 적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에만 의존한다면 이는 오히려 균형된 시각에서 북한경제를 평가하는데 방해요소가 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시장부문이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북한경제의 많은 부문은 여전히 계획경제시스템하에 작동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수부문을 비롯해 일부 주요 공장·기업소가 북한의 경제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정보가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북한경제 연구는 정책과 실태의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 최근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 국산화를 비롯한 과학기술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최소한 북한의 공식매체에 의한다면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정책이 관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증언들 및 지금까지의 현상을 통해 유추해 보면 실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유추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최근 조사에 따르면, 남포제련소, 남포유리공장 등 종업원이 1만~2만명이 넘는 특급기업소를 국가가 해체한 경우도 있었으며,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그 공장기업소의 가동률이 20~30%에도 못 미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이 감소되어 평양화력발전소에 무연탄 투입량이 증가되고 이를 통해 평양의 전력사정이 개선되었다는 보도가 있지만, 사실 평양화력발전소는 50년 전에 소련의 기술을 토대로 건설된 매우 오래된 설비이다. 따라서 현재는 투입량을 아무리 증대시켜도 생산력을 향상시키기에는 너무 노후화되었으며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적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현실과의 괴리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가 향후 북한경제 연구에서 풀어야 할 쟁점과 과제이다.

II. 북한경제 통계와 향후 연구

북한은 공식적인 통계자료의 발표를 중단한 지 오래다. 따라서 북한의 통계자료는 무역상대국이 발표한 거울통계가 전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자료조차도 중국과의 정치적인 특수관계로 인해 왜곡된 측면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최근 대북제재의 효과를 밝히기 위해 공식자료만으로는 한계가 많다. 역사적으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비공식무역 부문이 적지 않았다. 이는 북한경제 연구가 자료가 많이 축적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량적인 연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난 20년간 북한 연구자들은 꾸준히 정성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집계한 노력의 결과, 이 축적된 자료들이 정량화되는 연구성과를 올리고 있다. 일종의 북한 통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시장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를 정성적인 자료들의 정량화를 통해 수치화하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정성적인 자료의 축적에 의해 만들어진 표나 그래프 등은 비단 경제학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심지어 문화 등 다양한 범주로 확대되어 응용될 기초자료가 된다. 예를 들어, 83노동의 증가는 비공식부문의 확대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지만 동시에 거주이동의 제약을 완화시키며 체제를 약화시키는 동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지표로도 활용 가능하다. 즉, 경제학의 정치학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주민과 공식부문에서 종사하는 주민 간 소득격차를 벌려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하나의 사회학적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의 축적 결과, 북한경제도 북한학을 넘어 이제는 주류 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연구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물가와 환율이다. 축적된 물가와 환율 자료를 통해 다양한 경제 현상이 설명되고 있다. 물론 한정된 자료에 의해 만들어진 물가 바스켓이어서 과연 북한의 ‘물가’를 대표할 수 있을지의 한계도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물가바스켓을 정할 때 포함시키는 일정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데, 북한의 경우 장마당이나 종합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부 품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의 물가를 측정하는 바스켓에는 식유 등 품목을 확장시켜 자료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의 축적은 향후 북한경제 연구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